785-22010.5.2611:36AM페이지1(1,1)

가야산 골프장… 해인사 나서라

조계종 환경위 등, 제17차 국립공원정책포럼 개최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20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입장보다는 개발과 관광정책이 더 힘을 얻고 있어 해인사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분과위원회, 한백생태연구소는 5월 12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 제17차 국립공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의 어제와 오늘, 이후 전망'을 주제로 이병인 부산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영주 조계종 사회부 사회팀장, 김창기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조성반대 대책위 위원장, 박태현 강원대 교수, 최송현 부산대 교수,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4대강 사업 등으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업체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은 5월 12일 20년만에 다시 불거진 해인사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포럼을 진행했다.

이병인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4월 14일 가야산 골프장 현장 답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골프장 예정지의 문제점으로 △공원 내 훼손 행위 등 관리부실 △환경영향평가과정 중이면서 공원 내 현상변경 없이 불법 훼손사태 발생 △직간접 피해자인 해인사·심원사의 무관심 △상류지역 난개발로 인한 하류지역 친환경농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인 교수는 "경제살리기 녹색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건설사업이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사업"이라며 "한국에서 골프장 건설을 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위기와 환경파괴임을 확인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해인사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면 사업자체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을 사안이었음에도 해인사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야산 골프장 건설이 추진된다면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해인사이고, 지금 소임을 맞고 있는 스님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옥 대구환경련 사무처장은 "얼마 전 <해인>편집장을 만나러 갔는데 해인사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피하고 있었다"며 "사업주가 인맥을 통해 은밀하게 로비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만나 가야산 골프장 사업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사무처장은 "대구환경련은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을 승인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대해 이병인 교수는 "보존 위주로 관리돼야 하는 국립공원 내에서는 허가돼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환경부 존립자체에 대한 회의도 많은 실정에서 환경부는 국민을 위해 국토의 환경을 지켜간다는 원칙과 명분을 갖고 국가의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류에 휩쓸려 환경부가 골프장 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국립공원관리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해인사 스님들이 반대 못하는 속사정

해인사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과거 골프장건설로 성주, 의령, 합천 3곳에서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당시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해 스님들이 함께 했지만 고초를 겪었다. 지금은 고령, 성주, 합천지역이 문제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특별한 요청도 없어 관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덕곡리 주민들이 찾아와 한 쪽 부류는 도와달라고 하고 한쪽은 돕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덕곡리 마을 주민들도 양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스님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나는 피해가 없어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골프장 건설 관계자들이 해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1차 반대운동의 후유증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 후유증 중의 하나는 해인사 사중 스님들이 "환경연대 등 단체들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스님들은 당시의 일에 대해서 문화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일을 환경단체에 속아 그들의 들러리를 서면서 힘은 힘대로 빼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스님은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 해인사 스님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역을 둘러봤다. 세계 제일의 품질로 알려진 가야산 고령토를 다 캐어낸 지역에는 가야산에서 자생할 수 없는 나무들이 심어져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과 문화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적혀 있어 해인사 스님들이 반대운동에 나설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언 기자

한·중·일 관음성지순례사업

17일, 삼국불교문화 교류 발전 기원

한·중·일 삼국이 관음성지순례사업 전개를 통해 불교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아시아 불교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일본·중국관음성지 대표단을 초청 5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합동 법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일본 중부관음 츠보이 젠코 스님, 종훈 스님, 토진 스님, 중국 다오치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은 5월 17일 서울 조계사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일본관음성지연합회, 중국 보타산연합회 초청 합동법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훈 스님은 "법회와 관음성지순례사업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불교문화교류와 우호증진으로 불법을 세계에 알릴 수 가교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중부관음 대표주지 츠보이 젠코는 "연등축제를 보고 불법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며 삼국간 우호증진을 기대했다.

중국 보타산불교협회 회장 다오치 스님은 "삼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관음성지순례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불교문화사업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2008년 33개 관음성지를 선정해 광상품으로 출시했다. 주 관광 대상은 일본인이었으나 이번 간담회와 법회를 계기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3관음성지 순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관음성지 전용 16개, 혼합상품 36개, 템플스테이 1개로 53개 상품이 개발돼 1만 2000여 명(2009년 12월 기준)이 참가했다. **이상언 기자**

포교사단 위상 정립 시급

포교원, 제38차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출범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포교사 제도가 정착·되려면 포교사의 위상 정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 포교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는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포교사단, 포교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38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포교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돼 권대식 총무원 기획실 주임이 '포교사의 회고와 전망'을, 곽명희 포교사단 부단장이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발표했다.

조계종은 1982년 3월 처음 240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후 2000년 포교사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권대식 주임은 "포교사 제도는 불교 소양을 가진 인재를 현장 포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다양화·다변화되는 포교에의 접근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됐다"고 설명했다.

권 주임은 "포교사는 조계종단의 약점인 '출가자수 감소'를 메우기 위한 획기적인 타개책임은 분명하지만 스님과 일반신도 사이의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곽명희 포교사단 부단장도 "포교사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복전을 일구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불확실한 정체성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포교사를 배출한 종단이 활동지침을 통해 포교사의 역할을 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식 주임은 포교사단의 위상정립을 위해 포교원에는 △포교원 차원의 포교사 활동 지침 마련 △포교사 선발 방식 및 운용의 제도화 △포교원과 포교사간의 소통·교감을 위한 조직적 대안 마련 △포교원의 포교사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 협조를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김문수 후보 4대강 발언 파문

김문수 경지도지사 후보가 5월 14일 SBS '시사토론'에서 "신륵사 주지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의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불교계가 불교계의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한 불교능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공동대표 보선·수경·혜자·퇴휴·법륜스님, 이하 불교연대)는 17일 '4대강 개발 관련 거짓을 말한 김문수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후보의 사과·사퇴를 촉구했다.

불교연대는 성명서에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의 발언에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불교계 입장을 왜곡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불교종단의 근본사상을 훼손하고 불교를 능멸한 망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영 스님의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적 없다"는 확인 발언 이후에도 김 후보는 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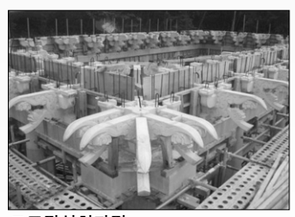
콘크리트 법당, 고건축! 시원종합건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흉내는 낼수있어도 금(金)과은(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성형제작과정

■포작성형양생과정

■부연성형양생과장


■포작설치과정

■서까래양생과정

설계에서 시공까지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시공된사찰

"최고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특징 저렴합니다/간편합니다/섬세합니다/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트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 본 업체는 시멘트법당 제조 및 시공에 관한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 (10-72820호 외 다수)로서 타인이 무단 침해할 경우 특허법 제126조 내지 131조 규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원종합건설(주) ISO 9001(품질경영)인증기업
WWW.SIWONCONST.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9-38 청호빌딩 4층 전화 02)565-0887(代) 팩스 02)565-1835